

광주 공군비행장 무안공항 이전 가능할까

무안지역 주민 동의가 최대 관건

활주로 공동사용·민간 매각설도 변수 국방부 “지역주민 반대편 이전 불가능”

무안국제공항이 광주 공군 비행장의 이전 최적지라는 의견결과가 나오에 따라 또다 공군비행장 이전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그동안 무안공항이 공군비행장 대체지로 타당하다는 내용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국방부가 ‘한국국방연구원’에 연구 의뢰한 ‘광주 군사 공항 이전의 타당성 용역 조사’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국방부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풀어야 할 과제=광주 공군비행장의 무안공항으로 이전 현실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 주체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우선 무안군과 주민들이 공군비행장 이전에 대한 찬성을 끌어내는 게 급선무다. 무안공항 개항과 더불어 한중국제산단

지·기업도시 유치로 통해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개발을 꾀하고 있는 무안군으로서는 군 공항 이전이 향후 발전계획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조바심에 금지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공군비행장이 이전할 경우 소음피해와 야간 비행금지 등으로 인해 동남아 물류·교역 허브 공항으로의 도약을 내다보고 있는 무안공항의 민항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무안군과 주민들은 반대 입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최근 국방부의 용역결과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엔 무안공항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정부의 ‘공항 선진화 작업 대상’으로 선정, 민간에 매각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점도 앞으로 처리방향에 영향을 미칠 변

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공항에 공군비행장이 이전할 경우 활주로를 민간항공기와 군용 항공기가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책 없는 국방부=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의 공군 비행장 이전 요구에 힘이 실리고,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처럼 주민들의 공항 이전 요구가 거세지자 지난 2007년 11월 말 한국국방연구원에 ‘광주 군 공항 이전의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했다.

용역 내용은 ▲무안공항을 확장해 이전할 경우 무안기업도시에 미치는 영향 ▲민간공항과 연계된 군용항공기지 발전방향 ▲효율적인 이전 협의와 민원발생시 해소방안 ▲무안공항으로 이전 불가 시 타 이전 후보지 선정과 이전 추진방안 등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같은 용역내용을 토대로 최근 무안군이 대체지로 타당하다는

용역결과를 얻었지만,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한 채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용역조사 결과 무안공항이 대체지로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무안군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타당한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설사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더라도 이전 지역의 주민 및 지자체가 반대한 경우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지 이전을 위해서는 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지자체에서 현 기지와 대등한 수준의 작전 효율성 유지가 가능한 대체 부지를 확보·제공하고, 이전 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입장은 무안군과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 등이 서로 합의해줄 기대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부, F1 경주장 건설비 지원 선회 배경

포틀러원(F1)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줄곧 부정적 견해를 보였던 정부가 F1 경주장 건설비용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서면서 F1 대회 성공 개최에 ‘정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정부가 애초 전남도가 지원을 요구했던 ‘개최권료’가 아닌 ‘경주장 건설비용’ 지원으로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자리 창출 사업 간주 李大통령 임김도 작용

◇정부의 입장 변화, 왜? =전남도는 애초 정부에 7년간 1천130억원의 F1대회 ‘개최권료’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최권료’가 특정기업에 대한 로열티 지급이라는 점 때문에 그동안 F1 대회 지원에 난색을 표명해왔다. 특히 관련 주무부처 장관인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은 시종일관 F1 대회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유 장관은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전남도청 방문 자리에서도 “F1은 성공과 실패가 반반이다”면서 “내년 1월 영암에서 첫 대회가 열린다는 데, J 프로젝트는 착수도 하지 않은 채 황무지에서 경주하는 셈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해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F1 대회에 부정적이었던 문체부가 F1대회

◇‘개최권료’ 아닌 시설비 지원 = 정부는 우선 ‘개최권료’의 경우 경제적 경비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피했다. 그 대신 경주장 건설비 지원을 통해 F1대회 개최 이후 경주장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BTL(민간자본 유치 사업) 방식으로 경주장 건설비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문광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 입장에서는 7년 동안의 대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만 있다면 경주장 기부채납은 환영할 만한 제안”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조달이 뜻대로 추진되지 않아 경주장 건설에 차질을 빚었던 만큼 이번 정부의 입장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정부의 경주장 건설비 지원이 가시화될 경우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남도 “경주장 기부채납 환영”

주최권도 정부서 가져갈 수도

경주장 건설비용 중 일부인 530억원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등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은 새로운 명분을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광부는 F1 경주장 건설비용을 최근 정부가 실업대책을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장 건설로 인한 고용 창출 등의 명분을 단 썬이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사항인데다 지난 1월 전남도청 방문에서 F1 대회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던 유인촌 장관을 충분히 설득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국회경기특위는 일반 상임위와 달리 F1 대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위인 만큼 여당도 반대할 큰 명분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광태(왼쪽에서 여덟번째) 광주시장과 박준영(아홉번째) 전남도지사가 2일 광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14개 종합병원 관계자들과 지역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협정을 체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첨단의료단지 유치 힘 모으자 광주시-전남도, 14개 종합병원과 의료산업 발전 협정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 14개 종합병원과 지역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14개 종합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14개 종합병원은 이번

협정에 따라 의료산업 발전과 지식정보의 교환 및 의료산업 육성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 의료산업과 관련한 연구 협력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도는 오는 4월 의료연구개발기관, 관련 기업과도 교류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유치활동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도는 현재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유

치를 위한 제안서 작성 용역을 실시 중이며 지난달 4일 중간보고회를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입지선정 평가방안 연구용역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나서 6월까지 최종 입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 1월 16일 대통령 주재 광주·전남 지역발전 토론회에서 유치를 건의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 장

관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또 오는 4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인 한승수 국무총리에게도 유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역 정치인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요즘... 사무실 통신비 부담되지요?

▶ 무조건 50%이상 절감시켜 드립니다.
▶ 단말기(Gateway)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1566-9927